노동운동의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말하다

기선옥 회원, 기후정의팀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한노보연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현장회원 간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심각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는 지금,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살피고 산별 노동 현장 실태, 실천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는 조건희 활동가가, 지정토론은 서비스, 통신, 공공교통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해 온 세 회원이 진행했다.

현장에서 기후정의 고민하기

토론회 시작을 연 발제 주제는 '노동자가 주체가 된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였다. 다소 거칠게 풀이하자면 기후위기 적응은 현재의 기후재난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기후위기 완화란 기후위기의 속도 자체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조건희 활동가는 두 과제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우리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 권리', 기후재난 발생·산업전환 시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법, 부당한 생산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든 열 스트레스 위험성 체크리스트, 한노보연이 2026년 여름 실행한 골프장 온도 현장조사 등을 사례로 들어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알렸다.

지정토론에서 정하나 회원은 택배, 가전통신과 배달 등 노동시간 내내 이동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현장 실태를 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는 2023년 이상기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기반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

하도록 가맹노조에 권고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한 건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 지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비스연맹이 2024년 서비스직 이동노동자 1,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재난 시 노동자 96%가 '위험하다'고 느꼈고, 몸의 이상을 느낀 사람도 85%에 달했지만 대부분 제때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기후재난 시 이동노동-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온의 주차장에서 일하던 마트 노동자가 급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도 대응하며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지승 회원은 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알렸다. 희망연대본부가 진행한 기후재난 질환예방 대책 수립, 작업중지 보장 등 기후위기 적응 실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 노사 논의 등을 단체협약으로 요구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각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고민도 전달했다. 노동자 고령화를 고려해 옥외 작업 할당을 조정하는 등 기후재난 대응이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으나, 개개 작업장의 조건을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모르면서 알 권리가 훼손되는 문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측이 기후재난 대응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측의 경영 방침을 따르라고 응답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나위 회원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기후위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기후위기 대응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노동조합 기후정의운동에서의 고민을 전했다. 최근 철도노조는 <한겨레>와의 공동기획에서 폭염으로 인해 선로가 구부러지는 일, 집중호우 산사태로 인한 선로가 끊어지는 일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부산지하철 역시 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나위 회원은 여전히 기후정의운동이 노동운동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같은 업종에서도 정규직은 작업중지 권한이 있지만, 비정규직과 일용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들며 기후재난의 불평등 문제도 짚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과제들

세 토론에서 언급된 산업들이 모두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들이기에 토론회 내내 집중할 수 있었다. 택배, 마트, 핸드폰과 인터넷, 지하철 모두 내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게도 친숙한 산업 현장 곳곳에 노동자들이 있고, 한노보연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 2026 919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석탄화력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들. 사진 : 백승호

그런 한편, 익히 알고 있거나 언론보도로 접한 문제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힘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걱정스러운 마음도 일었다. 나만 하더라도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함을 잘 알면서도 택배 물품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일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새벽배송을 시키지 않거나 배달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전부일까? 그래서 기후정의운동의 결과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협약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정지승 회원의 말에 무척 공감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정부가 이 구조를 바꿔야 하고, 기업이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산업전환이 자본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문제, '3대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계획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도 그린워싱을 일삼는 문제,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의 문제를 들으며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와 자본이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위가 이 정도여도 과연 괜찮을까? 기후위기 '적응', '완화'라는 표현은 너무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닐까?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산업전환을 해낼 수 있을까? 기후위기시대에 노동운동은 대중과 정부를 설득하고 자본을 압박할 산업전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등등….

기후재난의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다. 하지만 걱정되는 만큼 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기후정의운동을 매개로 노동과 시민 대중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노동자가 앞장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싶다. 알터